

**Lending to vulnerable households and consumption  
: Evidence from Korea**

이지은(전북본부)·심일혁(BIS)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금융자유화의 영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일부 선진국들의 가계부채(GDP 대비)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가계부채 누증이 금융불안 위험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 한국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DTI(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7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의 차주별·금융기관 유형별 가계부채 자료를 포함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차주 중 취약차주를 구분한 후, 이들의 특성, 금융기관 유형별 대출행태 및 이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 본고에서는 취약차주를 DSR(Debt Service Ratio, 소득대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50%, 70%, 90% 이상인 '비연체 고부채 차주'와 30일 이상 연체 경험이 있는 '연체차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비연체 고부채 차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연체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은 높지만, 연체차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체차주는 다른 차주에 비해 소비자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비연체 고부채 차주는 주택담보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자산을 많이 보유(asset-rich)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비연체 고부채 차주는 연체차주보다 신용등급과 소득 수준이 높아 신용 접근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약차주가 파산하지 않고 생존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유형별로 대출을 지속적으로 연장·확대하는 차환대출(evergreening) 행태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상차주는 비연체 고부채 차주 전환된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연체 고부채 차주의 경우 정상차주에 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은행금융기관이 차환대출을 제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의처: 전북본부 업무팀장 이지은 (☎063-250-4100)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가계부채DB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과정 등에서 결측, 오류, 특이치가 있을 수 있으며, 약 235만명(모집단의 4.8%)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에서 임의추출한 표본데이터이므로 업권별, 상품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경우 대표성이 낮아질 수 있음

4.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취약차주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별 및 도시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정상차주에 비해 비연체 고부채 차주는 향후 3년 동안 소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연체차주는 향후 1~2년간 정상차주에 비해 낮은 소비증가율을 보이다가 3년차부터 더 빠른 소비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의 소비증가율이 정상차주에 비해 더욱 완만하게 나타났다. 셋째, 전체가구 중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도시 일수록 향후 2년간 소비 증가율이 낮았으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층 비연체 고부채 차주 비중이 높은 도시일수록 소비위축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차주 비중이 지역별 또는 거시경제 전반의 소비흐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적 측면에서 비연체 고부채 차주의 소비행태를 고려하여 DSR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규제를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적으로 연체차주, 청년층 또는 저소득층 비연체 고부채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debt relief) 프로그램이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